

방통위, SKT·KT·LG유플러스에 과징금 34억

**‘중고폰 先보상제’ 시정명령
단말기유통개선법 위반
LG유플러스 16억 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중고폰 선(先)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9억 3400만원, 8억7000만원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18개월 뒤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30만~40만원가량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 등의 이름으로 작년 말부터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및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서자 올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제시한 조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고폰의 적정한 잔존 가치보다 많은 선보상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시행한 데다 18개월 후 반납 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 등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통신 3사가 위법 행위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 등

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30%씩 감액했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을 낮췄다.

회의에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안재석기자 yagoo@hankyung.com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 3사에 34억 과징금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은 위법”

‘중고폰 선보상제’로 휴대전화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고가요금제 선택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을 초과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이통3사에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18개월 이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미리 해당 단말기 중고기기 값을 지원금으로 제공받는 프로그램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프리클럽(SK텔레콤), 스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등이름으로 각각 운영하다가 불법 지원금 논란이 일자 이달 초까지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운영 기간에 55만9576명이 이 제도로 가입했다.

이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15억9800만원,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에는 8억7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서비스 가입 시 특정 요금제의 의무사용 기간 등을 부여하거나,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 결

과 이통사들은 중고폰 선보상제 제공 조건으로 월 6만2000원 요금제를 18개월 이상 의무가입하게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지원금 전액을 일시 반환토록 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통사들은 18개월 후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위약금 문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또 이통3사에 기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 이통사에 34억 과징금

“이용자 차별·반납조건 불명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각각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차별을 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18개월 의무사용을 해야만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8개월 후 중고폰을 반

납할 때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지도 않아 소비자와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중고폰 반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프리클럽’(SK텔레콤), ‘스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다가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단됐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반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LG유플러스는 부당하게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김준엽 기자

서울경제

2015년 03월 13일 금요일 A15면 산업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우회 보조금’ 논란이 일었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객 차별을 금

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LG유플러스에 15억9,800만원,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

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반납 중고폰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공시보조금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 요금제 선택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한다고 결론냈다. 또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조건이 불명확하고, 반납 조건도 복잡해 향후 분쟁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중고폰선보상제 이통3사에 ‘과징금’

방통위, 34억여원 부과 “특정 요금 강요가 문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라는 제도 자체는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전체회의를 LG U+에 대해 15억9800만원, SK텔레콤에는 9억3400만원, KT에는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과징금을 감경하고, LG U+는 1개월 가량 더 프로모션을 운영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30% 감경해 이동통신 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도록 한 프로모션이었다. 지난해 10월 LG U+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후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을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및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지난 1월 SK텔레콤과 KT는 해당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이어 한달 가량 뒤인 2월 27일 LG U+도 프로모션 운영을 중단해 현재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박지애 기자

방통위, 병주고 약주나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 이통3사에 과징금 “문제시정후 재도입”에 업계 “다신 안할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 면서도 제도 자체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선보상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LG유플러스에는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과 KT에는 각각 9억3400만원과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방통위는 곧바로 “‘중고폰 선보상제’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시행과정에서 사용자 차별행위 등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정 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news1.kr)

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시정하면 재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선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중고휴대폰의 상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을 시정하면 제도를 다시 활용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특정 스마트폰에만 선보상제도를 적용하거나 중고폰 예상 잔존 가치도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상한 것도 불법보조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운용을 중단한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부활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제도는 ‘아이폰6’의 인기몰이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특정제품에 보조금을 기습적으로 제공하는 마케팅을 펼칠 수 없게 된 이통사들이 묘수를 짜내 도입한 제도다.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고가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를 다시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방통위는 ‘중고폰 후보상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후보상제는 선보상제와 비슷하게 일정기간 사용 뒤 중고폰을 반납하면 그 대가로 단말 할부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 광 기자 hollim324@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는 적법...운영 과정은 위법”

이통3사 과징금 34억원

단통법 시행 후 도입...큰 인기
반납조건 등 논란 커지자 폐지

정부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통신 3사에 과징금 34억여원을 부과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보상제 운영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특정요금제와 연계해 가입자를 차별한 점 △일부 이통사가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이 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50%, LG유플러스에 30%의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성준 위원장은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며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운영하면 위법하

지 않다”고 말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가 도입한 것으로 18개월 후 중고폰 값을 휴대폰 구입 당시에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말기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으나 우회지원, 18개월 후 반납기준 불명확 등의 논란이 일면서 지난 2월 말까지 3사가 일제히 폐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선보상제와 함께 후보상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통 3사는 12개월 또는 18개월 후 중고폰을 반납하면 남은 단말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후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반납시점의 중고폰 시세와 남은 할부금 간 차액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이통 3사가 어쩔 수 없이 선도업체를 따라갔다는 해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과 관련, 방통위가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어떤 제도가 문제되면 이통사들은 선도업체가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따라갔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유권해석 등 시장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 34억

보조금상한선 초과 적용... LGU+ 가중제재로 최대액인 16억 부과받아

징계 남발 시장위축 우려도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며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단통법을 제대로 통신시장 서비스 경쟁에까지 과도한 규제를 가하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사에 34억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통사들은 지난 1월 방통위의 선보상제에 대한 사실 조사 이후 해당 상품을 철회했지만, LG유플러스가 가장 늦게 지난달 말 철회해 가중 제재를 받았다.

선보상제는 지난해 말 아이폰 6 출시를 계기로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통사들이 도입한 제도다. 즉 30만원 이내의 공식 보조금에 18개월 이후 단말기 반납을 전제로 중고 가격을 미리 산정해 지급,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현행 30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통위가 제도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규제권한을 지나치게 휘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현 시점에서 휴대전화의 예상 잔존가치를 추정해 과다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통위 스스로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봐놓고도, 지나친 규제를 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삼석 위원은 “시장에서 과열경쟁이 일어나 혼란이 발생하진 않았고, 이용

자 차별 침해 역시 심각한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단통법 이후 통신사들의 마케팅 수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본보기식 과징금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훨씬 클 전망이다. 이통사들로서는 보조금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데, 당장 눈치를 살피느라 몸을 사리고 있다. 단통법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인데, 프로모션 등에 대해서는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사 34억원 과징금

**제도 자체는 합법, 부과 조건이 문제
이통사 “서비스 종료… 재 실시 안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고폰선보상제가 위법 이 아니라는 판결에도, 이동통신3사는 해당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방통위가 중고폰선보상제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하면서 이통3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미 종료했고, 이미 종료된 서비스를 다시 하는 게 기업 이미지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이통사는 중고폰선보상제에 대한 결론이 늦은 감이 있다며, 대비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정부과 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중고폰선보상제’ 관련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중고폰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거나 선보상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의결했다. 이어 “제도를 시행하는 조건들이 잘못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시행한 중고폰선보상제가 초과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과징금 규모는 축소됐다. SK

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 경 감돼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 등 총 34억200 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통3사가 조건으로 제시 한 18개월 이후 중고폰의 잔존가치가 적절히 산 정됐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18개월후 반납조건들이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 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에 내린 시정명 령과 과징금 부과는 이 같은 조건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문제도 발견됐 다. 이통 3사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 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 시 위약금으로 선보 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명확한 고지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종료한 마케팅 전략을 재논의하는 것은 서비스 이미지 상에 도 좋지않다”면서 “중고폰선보상제를 운영하 면서 지적받았던 부분은 다음 서비스 준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면서 “사업부 서에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안다”고 전 했다.

/김범주 기자 yestoday@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 산정 기준 불투명 잔존가치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 산출 근거로 제시한 스마트폰의 '잔존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제11차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통 3사가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이다.

방통위는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구입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의 중고폰 시세는 10만원인데 실제로 통신사가 선보상한 금액이 20만원이라면 차액 10만원이 지원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8개월 뒤 단말기 반납 시점에서 가입자들이 수리비 등을 부담할 수도 있고, 단말기 상태가 좋지 않아 반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18개월 뒤에 통신시장의 환경이나 단말기 수급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정 잔존가치’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잔존가치가 추정이라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와 방통위의 잔존가치 산정 금액 차이가 1% 미만”이라고 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방통위는 “잔존가치 그것 하나를 딱 짚어서 과징금 부과 시의 산정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과다성 여부, 위반 행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들어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한준호 기자 hanj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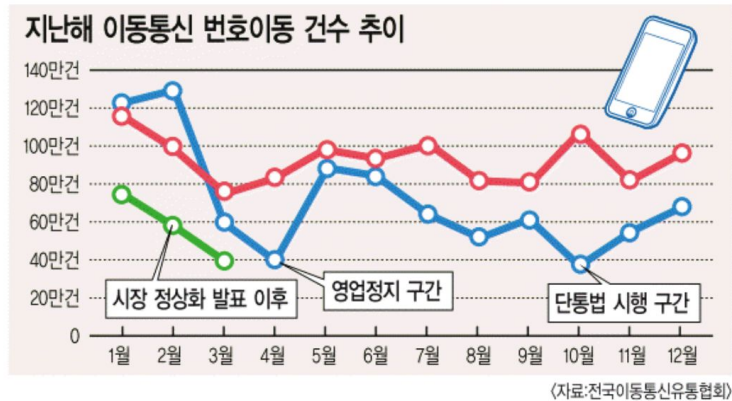
단통법 5개월... 유통업계 '번호이동 반토막'에 울상

“단통법발 시장냉각에 문단을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중소 통신유통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단통법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5개월째 얼어붙은 통신시장에서는 번호이동이 반토막 나는 등 유통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번호이동이 줄어들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동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지난해 2월보다 올해 2월 번호이동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2월 3사 번호이동 건수는 129만7092건인 반면, 올해 2월은 55.4% 감소한 57만9878건에 그



쳤다. 이통3사 보조금이 2월보다 높았던 올해 1월도 75만6654건을 기록, 122만5586건이었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해 38.3% 줄어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만 힘들어지기 시작해 과열은커녕 냉각기만 이어졌다”며 “대형 유통망 확대, 시장 냉각 등으로 폐업이 잇따르는 등 생존권이 침해받

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홍보나 보완에만 힘쓸 게 아니라 진정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지나친 시장 냉각으로 디플레이션을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KT “LTE-A 세계최초 상용화 허위광고로 영업 피해”

SKT 상대로 10억원 손해 청구

KT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광고를 내보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의 부당광고에 따른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 등의 손실로 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이동통신 환경을 고려할 때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사업자들 간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며 “KT가 입은 영업·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작년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

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올 1월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비슷한 시기 해당 기술 최초 상용서비스를 준비하던 KT는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은 상용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상용화라고 볼 수 있다며 KT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다지털타임스

2015년 03월 13일 금요일
002면 종합

3밴드 LTE-A 세계최초 논쟁

KT, SKT에 10억 손해소 제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번졌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는 허위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전날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는 SK텔레콤의 광고로 인한 손실액이 2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지난달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정윤희기자 yuni@

기업메시징 공정위 제재 ‘행정소송’

LG U+, 현실과 맞지 않아 곧 제기
KT도 준비 작업...논란 확산될 듯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 KT 역시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어 기업메시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주 최종의결서가 이동통신사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의결서에는 과징금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겼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기술발전에 따른 현실과 맞지 않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톡 등 신규 메시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공

정위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이번 공정위 결정의 근거가 된 시장점유율이 2013년 한 해 동안만 집계한 것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점유율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몇 년간 시장점유율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LG유플러스 입장이다.

KT도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문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두 사업자에만 제재를 가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KT 시장점유율이 25%인 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려 당분간 기업메시징을 둘러싼 불공정행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안방서도 기가와이파이

KT,무선데이터 이용급증 반영 '기가 홈' 내놔

직장인 김 모씨는 업무가 많은 날에는 퇴근 후 가정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럴 때 유선 공유기에서 잼을 뽑아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공유기가 한 대뿐이라 같은 시간에 다른 가족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함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가 공공 장소에 이어 최근 가정용 기가와이파이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어서며 이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일상생활이 되고 있다. 장소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24시간 이용하면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초 월 3만TB(테라바이트) 수준이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해 말 월 13만TB를 넘어서 5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지난해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 방법(복수 응답)은 LTE가 86.9%, 무선랜(와이파이·테더링) 83.7%로 대다수가 LTE와 와이파이를 동시에 쓰고 있다. 또 모바일 인터넷 이용 장소는 가정이 92.4%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도 가정용 모바일 통신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KT는 최근 가정에서 무선 통신

무선 데이터 이용량 (단위=TB)



속도를 크게 높인 '올레 기가와이파이 홈'을 선보였다. 기가와이파이 홈은 기존 가정 와이파이 서비스에서 기가급 속도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867Mbps에 달한다. 이는 40GB(기가바이트) 분량의 고화질 영화 1편을 6분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3GB 크기 음악 100곡은 단 28초면 다운로드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집안 곳곳에서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켜 김없이 기가급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며 "집에서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화와 음악 등 콘텐츠는 고화질·고음질에 따라 용량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일반 해상도 영화 한 편당 용량은 700MB~1.4GB였지만 최근 UHD급 화질 영화는 30~40GB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5년내 가정용 IT 기기들은 대부분 초고속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서찬동 기자

공영홈쇼핑·홈쇼핑 지분 중기유통센터-농협 중복 보유

공영홈쇼핑 탄생을 앞두고 홈쇼핑과 중복 지분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여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공영홈쇼핑의 1·2대 주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 참여가 확정되면서 홈쇼핑과의 지분 중복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공영홈쇼핑 지분 50%(중기유통센터)와 45%(농협)를 소유하면서 홈쇼핑 지분도 각 15% 보유한다.

홈쇼핑·공영홈쇼핑 지분 중복에 따른 논란

구분	내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	△농협 및 중기유통센터가 상법상 인정되는 소수주주권 행사 시 회사 운영 및 경영전략 접근 가능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중기유통센터와 농협은 홈쇼핑 지분 30%, 공영홈쇼핑 지분 95% 보유 △홈쇼핑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취급 부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2대 주주가 비슷한 회사 만드는 격” 정부 “문제 없다” 입장에도 논란 예고

두 곳이 지분 결합시 홈쇼핑 30%를 소유해 1대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33%)에 어느정도 근접한다.

찼찼한 곳은 중기중앙회다. ‘공영’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지만 지분 구조상 턱 밑에 있는 두 곳(농협·중기유통센터)이 손잡고 또 다른 TV홈쇼핑을 만드는 격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대 주주 두 명이 따로 회사를 만든다는 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법률 위반 가능성도 제기한다. 공영홈쇼핑의 주요주주인 농협과 중기유통센터가 홈쇼핑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경영 및 영업정보를 포함 각종 회사 운영과 사업계획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든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인 농협이 공영홈쇼핑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농협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여기에 중기유통센터와 농협은 홈쇼핑 지분 30%와 공영홈쇼핑 지분 95%를 보유해 업계 경쟁 제한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다. TV홈쇼핑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 취급하는 부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급기야 승인기관인 미래창조

학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한 상황이다. 홈쇼핑과 공영홈쇼핑 주요주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미래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영’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등 우려하는 사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영홈쇼핑이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과 중기유통센터가 소액 지분 3% 이상만 매입하면 최다지분 확보가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미래부는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현재 미래부)가 홈쇼핑 방송 사업을 승인할 당시 5년 동안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시 승인을 얻도록 한 것. 예외조항도 상속, 법적인 판결 등 극히 제한돼 있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지분매각을 금지한 것은 ‘대기업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일부 홈쇼핑 지분 매각 과정에서 유통대기업이 참여한 전례가 있어 이번 논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쇼핑업체 한 관계자는 “후발주자이고 사업모델도 달라 걱정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대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20살 성년된 '케이블TV'... 새로운 20년 성장 준비

UHD·IoT 등 신기술 통해 새먹거리 찾는다

〈울트라고화질〉 〈사물인터넷〉

유료방송 물꼬 텃지만 IPTV 개국 이후 '위기' 신성장동력 확보 총력

올 해로 20살 성년이 된 케이블TV가 양질의 콘텐츠와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통해 다시 한번 방송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TV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청자 및 방송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행복나눔 방송축제'를 이날부터 사흘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했다.

국내에 유료방송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주도하던 국내 방송 시장에 유료방송과 콘텐츠 다양화, 지역특화 방송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인터넷TV(IPTV) 개국 이후 치열한 유료방송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한채 제자리에 머물며 성장통을 앓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성년을 맞은 한국 케이블TV 업계의 최대 과제는 '새 먹거리 찾기'로 모아지고 있다.

■韓 유료방송 산업 물꼬를 트다

지상파의 방송이 TV 프로그램의 전부였던 1995년, 케이블TV는 '돈을 내고 TV를 본다'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만들어 냈다.

출범 당시 케이블TV는 48개 중

케이블TV 출범이래 주요 사건들

- ▶ 1990년 4월 30일 공보처,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 구성
- ▶ 1991년 12월 31일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 ▶ 1994년 8월 17일 한국형 케이블TV 시범방송 개시(수원종합유선방송)
- ▶ 1995년 1월 5일 케이블TV 시범방송 개시
- ▶ 1995년 3월 1일 케이블TV 본방송 개시(24개 PP채널, 48개 SO, 10만여 가구 대상)
- ▶ 1999년 11월 1일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작
- ▶ 2000년 1월 12일 통합방송법 제정
- ▶ 2002년 3월 1일 위성방송 서비스 출범
- ▶ 2005년 2월 1일 디지털케이블TV 상용서비스 시작(세계최초 Open Cable 방식)
- ▶ 2007년 9월 1일 케이블 인터넷전화(VoIP) 상용화
- ▶ 2008년 11월 17일 IPTV 서비스 시작
- ▶ 2010년 6월 1일 N스크린 서비스 시작
- ▶ 2011년 7월 5일 이동통신사업(MVNO) 시작
- ▶ 2011년 9월 22일 케이블 기기인터넷 서비스 시작
- ▶ 2012년 8월 1일 세계최초 케이블TV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작
- ▶ 2013년 6월 24일 세계최초 HTML5 기반 스마트케이블 서비스 실시
- ▶ 2014년 4월 10일 세계최초 UHD 상용서비스 시작



자료 : 케이블TV 협회

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9만7463가구를 대상으로 24개 채널을 송출하며 방송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민의 절반이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시대지만, 20년 전 케이블TV가 개국할 때만 해도 방송 프로그램을 돈 내고 보는 일은 낯선 풍경이었다.

그러나 케이블TV는 개국 8년만인 2003년 가입가구 1000만을 돌파하며, 전국 가구의 절반을 유료방송 가입자로 확보했다. '한국 유료방송 산업의 물꼬를 튼 주인공인 셈이다. 이후 케이블TV는 2005년 디지털케이블TV 방송을 상용화하면서 주문형비디오(VOD) 등 다양한 부

가상품 시대를 열었다.

■방송·통신 결합시대 다시 위기

케이블TV가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물꼬를 트고 1500만 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하는 등 승승장구 했지만, 지난 2008년 IPTV 개국 이후 무한 경쟁 시대의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형 통신회사들이 IPTV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무한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위기의식이 극대화되고 있다.

실제 2009년 이후 가입자 수가 공식 집계된 지난해까지 케이블TV 가입자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양과 질 갖춘 콘텐츠로 경쟁력 ↑

때문에 20돌을 맞는 케이블TV 업계의 속내가 마냥 기쁠 수 만은 없다. 위기 모면을 위해 케이블TV가 선택한 방법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시장을 새롭게 선점하는 것이다.

차세대 방송서비스로 각광받는 울트라 고화질(UHD) 프로그램으로 다가올 UHD 방송 시장을 선도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 중 가장 많은 16만 편을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 UHD VOD 수를 대폭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양질의 콘텐츠를 경쟁사들보다 앞서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에 진출할 미국 VOD업체 넷플릭스와 협력도 준비 중이다.

■UHD·IoT·클라우드로 새로운 20년 노린다

케이블TV 업계는 IC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20년 성장을 준비 중이다. 이를테면 스마트홈 개념을 도입해 시청자가 평소 TV시청 패턴과 달리 TV 시청 시간이 줄거나 시청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독거노인 안부알림', 등록된 가족을 인식하고 현관문을 제어하는 '홈 자동화', IoT 기술로 실내 온도나 습도를 조절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홈 케어' 등의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케이블TV 출범 20주년 기념 '행복 나눔 방송축제'를 개최했다. 방송 관련 신기술과 콘텐츠가 선보인 가운데 관람객들이 풀HD 커브드 OLED TV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케이블TV, 더 선명해진다

출범 20주년 행사…홈초이스, 차세대 UHD 방송 '넥스트 4K' 공개

케이블TV업계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차세대 초고화질(UHD) 방송 '넥스트 4K'를 선보였다. 2017년까지 케이블 방송을 100%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 맞춰 클라우드, 기기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도 적극 도입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희부)는 케이블TV 출범 2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행복나눔 방송축제'를 개최했다.

양희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그동안 케이블TV는 연간 1조원을 웃도는 비용을 투자해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를 진화시켰다"며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케이블TV에 접목해 '소통하는 TV'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케이블TV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를 운영하는 홈초이스(대표 최정우)는 UHD 화질을 한 단계 개선한 '넥스트 4K' 기술을 선보였다.

홈초이스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넥스트 4K는 TV 화면의 영상 밝기 영역을 사람의 눈과 가깝게 확대시키는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도입했다. 8단계로 구분했던 기존 명암 체계를 14단계로 늘렸다. 색상 영역은 30% 확대해 기존 UHD 방송보다 한층 다양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 방송용 넥스트 4K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홈초이스가 세계 최초다.

양희부 케이블TV방송협회장
"2017년 100% 디지털 전환
다양한 스마트 기술 접목해
'소통하는 TV' 시대 열겠다"

최정우 홈초이스대표는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상용화한 케이블TV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며 "양질의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케이블TV UHD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초이스는 다음 달 유맥스 채널을 종일 방송 체제로 개편한다. 현재 200시간 수준인 UHD 방송 콘텐츠 분량을 연내 1000시간으로 확대한다. 행사에 참가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IoT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다.

TV시청 패턴에 따라 거주자 이상을 감지하는 '독거노인 안부알림', 가족 구성원을 인식해 현관문을 제어하는 '홈 자동화', 실내 온도·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홈 케어' 등이 눈길을 끌었다. 케이블TV 업계는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희부 회장은 "현재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올해 서울, 부산 등 도시 지역은 문제없이 100%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다"며 "아날로그 가입자 비중이 높은 CMB 권역도 디지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어 오는 2017년 전국을 100%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케이블TV 업계는 합산규제 법안 법제화를 계기로 유료방송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결합상품 등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는 요인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석 현대HCN 대표는 "결합상품은 방송, 초고속 인터넷 등 각각의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과 창조경제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희부 회장은 "정부와 유료방송이 결합상품 중심 저가 시장을 어떻게 개선할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케이블TV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청자 및 방송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행복나눔 방송축제'가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했다. 이날 관객들이 스마트폰과 TV를 이용한 홈 자동화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UHD 진화 ‘차세대 4K’로 시장선도”

케이블TV 출범 20주년

‘스무살’을 맞은 케이블TV가 4K 초고화질(UHD), 스마트홈 등을 무기로 차세대 방송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UHD 화질의 진화모델 ‘차세대 4K(Next 4K)’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양희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케이블TV 출범 20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HD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로 이끌 것”이라며 “케이블TV는 더 이상 거실이나 안방의 TV에만 머무르지 않고 UHD,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유료방송의 진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4K’는 사람이 실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감을 거의 모두 표현할 수 있는 UHD 화질 진화모델이다. 기존 4K UHD와 해상도는 같지만, 명암을 기존 8단계에서 14단계로 늘리고 컬러 영역도 30%

화질 생생...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감 모두 구현
가입자 이탈 급증·디지털 전환 부진 등 과제로

더 넓혔다. 영화제작에 테스트 형태로 도입된 적은 있지만, 방송용으로는 세계 최초다. UHD채널 유맥스를 운영하는 최정우 홈초이드 대표는 “해외 합작 UHD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연내 1000시간의 분량의 양질의 UHD 콘텐츠를 확보할 것”이라며 “내달에는 기존 하루 20시간 UHD 방송 송출을 24시간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가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경쟁서비스인 IPTV에 밀리며 가입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에 따른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전환 부진 문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블TV 가입자수 총 1467만6658명 가운데 디지털 가입자는 48.6%에 불과하다. 여기에 방송콘텐츠 제값 받기,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 등도 현안으로 꼽힌다.

양 회장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결합상품으로 고착화한 방송 저가화를 개선해 방송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대도시에 100%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자 한다”며 “오는 2017년에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최근에는 차기 협회장 자리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낙하산’ 논란으로 업계가 시끄러운 것도 걸림돌이다. 협회는 20주년 행사가 끝난 후 오는 17일 면접, 19일 이사회를 거쳐 26일쯤 차기 협회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yuni@

SK그룹, 유선방송업체 ‘씨앤엠’ 인수 가능성

Chosun.com 단독

SK그룹이 방송·미디어 관련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인 씨앤엠이 유력한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SK 관계자는 12일 “미디어 사업 강화를 위해 SK텔레콤 상품기획부문 소속이던 미디어본부를 사장 직속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 대표가 미디어 업체 인수 업무 등을 직접 챙기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M&A 전문가를 채용하

기 위해 면접을 마쳤고 최종 합격자 결정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SK가 인수할 가능성이 큰 업체로 씨앤엠을 꼽는다. 씨앤엠은 가입자 238만명으로 KT(790만명), CJ헬로비전(422만명), 티브로드(330만명), SK브로드밴드(300만명)에 이어 국내 5위 유료방송 업체다. 씨앤엠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올 초 국내외 방송·통신업체에 씨앤엠을 팔겠다는 투자안내서를 보냈다. SK가 씨앤엠을 인수할 경우 SK브로드밴드 가입자와 합쳐 단숨에 국내 2위 유료방송 사업자로 도약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2조3000억원에 씨앤엠을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매각 금액으로 2조원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서 씨앤엠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K는 기존 주력 사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으로 미디어 사업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SK그룹의 양대 축인 통신과 정유업은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로 정체 상태다. 백강녕 기자

“돈 갖다 쓰세요” TV廣告 하루 1300번… 아이도 CM송 따라 불러

(광고 음악)

금융文盲 대한민국 (2)

출근길 대출광고 세어보니

‘안심하오 안심하오~ 대출할 일 생겼는데~ 서류 준비 어떡하오~.’ 12일 오전 6시40분, 기자가 아침에 눈을 떠 TV를 틀었더니 국악 장단에 어우러진 흥겨운 CM송이 흘러나왔다. 한복을 입은 여성 캐릭터 네 명이 두 팔을 들썩이더니 대출 서류를 서류 파쇄기에 파기하는 장면이 나왔다. 곧이어 300만원까지 금융권 연체가 없다면 대출해주겠다는 문구가 대문짝만 하게 떴다. 약 40분 동안 4~5곳의 케이블 채널에선 알록달록한 캐릭터,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등장해 ‘300만원까지 즉시 대출’ 등을 노래 부르는 대부업체·저축은행 광고 10여개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하루 평균 1364건에 이른다.

◇TV에서 동네 전봇대, 버스·지하철까지 사방에 빔 광고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정문을 나서니 바로 앞 전봇대에 ‘카드, 010-XXXX-XXXX 영등포역’이라는 전단이 붙어 있었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카드를 불법으로 발급해준다는 광고다.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한 버스에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하는 A저축은행의 로고가 광고판 형태로 내걸려 있었다. 이 저축은행은 매년 36억원가량의 광고비를 서울시 버스조합에 지급하고, 서울시 버스 7000대(광역·마을버스 제외)에 로

고를 광고하고 있다. 버스에 올라타니 ‘개인 회생, 파산 면책(파산해서 빚 부담 없애는 것), 모든 빚 청산’이라고 적힌 광고가 운전석 뒤에 붙어 있어 눈에 확 들어왔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도착했다. 환 경미화원 임모(60)씨는 “아침엔 지하철 출입구에 덕지덕지 붙은 대출 광고부터 떼는 것이 일”이라며 “얼마 전엔 덩치 큰 젊은이들이 찾아와

버스·지하철·전단 광고 등 2시간만에 200여건 보게 돼

파산·개인회생 광고도 많아 대출 권하고 파산하라는 셈

라스베이거스 출신 미국인 “도박 도시도 이 정도는 안해”

‘아줌마, 자꾸 전단 폐지 말라고!’ 라고 욕박지르더라”고 했다.

지하철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벽에 ‘아직도 빚을 빚으로 갚고 계십니까?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고민 해결’이라는 개인 회생, 파산 면책을 권하는 액자 광고판이 벽에 붙어 있었다. 지하철 안에도 광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하철 칸마다 광고판에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알선 명함이 10여개씩 붙어 있었다. 이쯤 되니, ‘집에서는 (TV 보며) 고금리 대출받고, 밖에서는 (전단 보고) 파산하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철에서 만난 미국인 페티트(Petit·27)씨는 “라스베이거스(도박

로 유명한 미국 도시) 출신인데, 버스나 지하철에 이렇게 많은 대출과 파산 광고는 처음”이라며 “완전 미친 것 아닙니까?(It’s crazy)”라고 했다. 서울 강남의 IT업체로 출근하는 주부 김모(40)씨는 “이제 다섯 살 된 딸이 ‘산와, 산와~’라는 멜로디의 한 대부업체 CM송을 따라부르고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신 그 노래 따라 하지 말라고 혼내도 무척 좋아해요. 큰 고민이에요.”

◇2시간 동안 대출 관련 광고 200여건… 규제 법안, 국회서 낮잠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했더니, 친구 페이지에 ‘대출 24시 문의’란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돼 올라왔다. 이 페이지에 접속했더니 현금 5만원권 수십장을 바닥에 뿌려놓은 사진을 올려놓고 ‘95년생, 당일로 100만원 3시간에 만들어 드립니다’ ‘당일 2000만원 아이템 나왔습니다. 연락해주세요’라는 글들이 수도룩했다. 페이스북 검색을 하다 보니, 불법 사채업자들이 구축한 일수 등 불법 대출 페이지만 100여개가 넘었다. 굳이 인터넷상의 대출 광고 배너를 찾아다니는 필요가 없었다. 최고 50억원 대출이 가능한 연 24% 금리 일수대출 상품에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주겠다는 일본계 저축은행 광고도 눈에 띄었다.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최모(32)씨는 “출퇴근하면서 최소 100건의 불법 대출 광고를 원치 않게 보는데, 매일 ‘내 인생의 이자 상환선은 10%’라는 주문을 스스로 외우면서 애써 외면하려

케이블 TV에 방영된 대부업 대출 광고 추이



일일 평균 대부업 대출 광고수	1364건
케이블TV 전체 광고 대비 편성 비율	10%
상위 5개 대부업체가 지난 4년간 지출한 광고선전비	4800억원

자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실



성형주 기자

서울 신정네거리역 길바닥에 12일 대출 광고 명함들이 떨어져 있다. 본지 기자가 아침에 눈을 떠 출근까지 두 시간 동안에만 거리에서 마주친 대부업 대출 광고와 개인 회생, 파산 면책 광고가 무려 200여건에 달했다. 무분별한 대출 광고가 활개를 쳐도 이를 막을 만한 법적 규제가 없다.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안에 붙은 개인 회생 명함을 뺏히 쳐다보던 대학생 김모(25)씨는 “내 친구한테 필요한 정보”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고 있지만, 대부업체에서 연 39% 금리로 400만원을 빌렸다가 연체해 저한테도 돈을 꾸려는 친구 녀를 스스로 외우면서 애써 외면하려

려 명동 한복판에 들어서자 ‘일수대출, 100% 당일. 중도 상환 시 이자 면제!’라는 문구의 광고 전단 수십장이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 출근까지 2시간 동안 눈에 들어온 대부업 대출 광고와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알선 광고만 200건이 넘었다. 출근길에도 얼마든지 급전(急錢)을 빌릴 수 있고, 맘만 먹

으면 빚을 안 갚고 파산하는 안내까지 받을 수 있었다. 무분별한 대출 관련 광고가 활개를 치는 것은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하거나,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만이라도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신영 기자



케이블TV에 등장하는 대출 광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빌릴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청자의 판단력을 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숨어 있다.

대출 광고는 왜 주로 TV에? 代理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TV, 판단 흐리게 하기 쉬워
대리급 30대가 최대 고객

쉽게 빌려준다는 건 역으로
지옥까지 가 받아낸다는 뜻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건
누구나 高금리라는 의미

대부업체들은 막대한 물량 공세로 TV 광고를 점령 중이다. 대형 대부업체 네 곳만 합쳐도 매년 평균

1200억원을 광고 선전비로 쓴다. 기아차, KT, 남양유업 같은 대기업 광고 예산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대부업체는 지상파 광고를 못 하는 대신 광고 단가가 싼 케이블TV에 집중하기 때문에 노출 빈도가 훨씬 높다. 그래서 전체 케이블TV 광고 10편 중 한 편이 대부업·저축은행 광고다. “TV를 틀면 나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광고는 대부분 경쾌한 음악과 코믹한 화면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 문맹을 흐리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

대부업체 광고 전략의 두 키워드는 ‘쉽·빠·간’과 ‘TV’다. ‘쉽·빠·간’은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를 줄인 말로 광고업계에서 중요한 마케팅 개념 중 하나다. TV에 집중하는 이유는,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는 독자가 메시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광고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TV 광고는 짧은 시간 ‘이미지’에 성패를 걸어 시청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쉽기 때문

이다.

광고 제작사 이노션의 엄철 본부는 “대출이란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인데, 마치 매우 가볍고 쉬운 일이란 이미지를 준다”고 말했다.

대부 광고에 무대리·봉대리 같은 ‘대리’나 계약직 영업 사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젊은 층 직장인들이 대부업체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이다. 대부업 이용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58.5%로 가장 많다. 대부업체 주 이용

계층인 ‘대리’를 내세워 ‘나만 대출 받는 것이 아니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전략이다.

‘한 달 안에 갚으면 무이자’를 내세우는 업체들도 있다. 고금리 대부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관대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을까. 한 달 안에 못 갚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을 대부 기간별로 보면 3개월 미만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17.7%에 불과하고, 1년 이상 이용하는 비율도 48.3%에 이른다.

대부업체들은 “클릭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 준다”고 광고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유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高)금리를 물

리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용 등급 1~2등급도 대부업체에서는 30%대 고금리를 내야 한다.

방송광고심의위원장을 지낸 김민기 숭실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부업체들이, 급하면 택시를 타는 것처럼 대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로 합리화해서 시청자를 심리적으로 무장해제한다”면서 광고에 나오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누구나 간편히 대출’이란 말은 곧 ‘지옥까지라도 가서 빌려간 돈 받아내겠다’는 뜻이고, 신용 등급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넌 여기 아니면 돈 빌릴 데 없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최규민·박승혁 기자

〈자주일보〉

從北매체 문 닫으며 또... “새 언론사 속히 만들 것”

서울시 제재에 꿈수창간 예고

종북(從北) 논란으로 폐간(廢刊)된 자주민보의 후신(後身) ‘자주일보’가 서울시의 제재 조치에 따라 결국 문을 닫았다.

자주일보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린 안내문에서 “서울시에서 3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간 정간 처분을 내리면서 계속 언론 활동을 할 경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문을 보내왔다”며 “어떻게든 자주일보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일단 사이트를 닫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주일보는 “전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조건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새로운 언론사는 속히 만들어질 것이다. 더 잘 갖춰진 언론사로 다시 독자들과 곁으로 돌아오겠다”며 다른 인터넷 신문을 창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이미 폐간 결정이 난 자주민보 홈페이지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논란 대상이 됐던 기사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측은 이런 문제점을 예상해 “폐간된 인터넷 신문의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삭제할 수 있게 신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주민보 등록 취소 절차는 내부적으로 완료됐지만, 사이트 폐쇄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 ‘폐쇄 요청’을 했다”며 “또 자주일보가 예고한 대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발행인으로 내세워 또 다른 인터넷 신문을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연합뉴스 공적지원 4천억 ‘여권 편향’ 구조 개선돼야”

한국언론학회 토론회

한국언론학회(회장 심재철 고려대 교수)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속보가 급속히 퍼지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뉴스통신사들의 미래를 짚어보는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뉴스통신시장은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이 독점하다가 2001년 <뉴시스>, 2011년 <뉴스1>이 등장하면서 3사 체제가 됐다. 대신,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법) 제정으로 국가 기간 뉴스 통신사로 지정된 상태다.

토론회는 주로 ‘공영 언론’ 성격을 띤 연합뉴스에 대한 평가와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신동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발제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도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정부가 구독료 항목으로 연합뉴스 쪽에 3920억원(2015년 예산 포함)을 지원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장비 구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고 보조는 같은 기간 392억원으로, 모두 4312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는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보지를 확대하는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친정부적’ 보도 경향을 보이며 정부에 의존하는 구조를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시스>, <뉴스1> 같은 통신사들의 경우, 뉴스통신진흥법이 국가 기간 통신사 지위나 정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영재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정파성이나 상업성을 강조하는 신문·방송과는 다른, 공정성을 중시할 공영 뉴스통신사는 필요하다”며 “연합뉴스는 불공정 보도 논란을 부르는 (정부·여당 편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합뉴스는 스스로 어떤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핀테크 사업 조정 ‘상설협의체’ 만든다

**정부·금융권·IT기업 모여 협업 논의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운영 맡을 듯
중·일과 ‘동북아 연구재단’ 추진도**

핀테크(Fintech) 관련 업종 간 주도권 다툼을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핀테크 중심지 구축을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핀테크와 관련해 금융권 대(對) 정보기술(IT)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가 감지돼 자칫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책·감독 당국 등 정부,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 등 금융권, 보안을 포함한 IT업계를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설립 배경에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두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보폭을 맞추는 금융권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IT업계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는 금융 대 IT 구도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맡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며 “지난달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현정택 전 부의장의 후임이 정해지면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체뿐만 아니라 ‘동북아 핀테크 연구재단’도 설립할 예정이다. 핀테크를 한국만으로 한정해서는 시장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중국과 일본도 같이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연계된 대학·대학원 수준의 핀테크 산학협력 학과와 관련 프로그램도 동시에 마련된다. 미국 뉴욕에서 시 정부와 15개 회사 등이 공동 운영중인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Fintech Innovation Lab)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금융분야의 핀테크 투자 지원, IT 창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 액센츄어에 따르면 2008년 9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전세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난해 30억 달러에 육박해 3배 이상으로 몸집이 커졌다. 향후 연간 3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핀테크**=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영문 글자로 만든 합성어다. IT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컫는다. 송금·결제부터 자산 관리까지 IT가 결합된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기존의 금융회사와 달리 IT업체들이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돈 필요하다” 석달만에 다시 등장한 ‘原電 해커’

한수원 자료 등 25건 또 공개
“朴대통령 통화내역” 주장 파일도
靑 “北, 국면전환 위해 저지른듯”

작년 연말 해킹한 원전(原電) 내부 도면을 인터넷에 다섯 차례 공개하면서 ‘성탄절 원전 파괴’로 협박했던 해커가 79일 만에 또다시 원전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12일 오후 스스로를 ‘하와이에서 원전 반대 그룹 회장 미.핵.’이라 주장한 네티즌은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관련 자료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통화 기

록이라고 주장하는 한글 파일 등 25개 문건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 해커는 ‘돈이 필요하다. 북유럽과 동남아,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원전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며 ‘통채로 팔았다가 박 대통령의 원전 수출에 지장이 될까 봐 두렵다. 윤 장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간을 좀 주겠으니 잘 생각해 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몇억달러 아끼려다 더 큰돈을 날리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면서 ‘요구에 응하려면 장소와 시간은 너님(너희란 뜻)들이 정하라’고 밝혔다. 해커는 미국 온라인 포털 사이트 계정으로

된 이메일 주소까지 남겼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이에 대해 “이번 추가 공개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 사건으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국면 전환용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합동수사단은 이날 해커가 미국에 본사를 둔 트위터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함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 연말 해커 추적에 나서 중국 IP(인터넷 주소) 수백개가 사용된 흔적을 확인하고 이를 중국 당국에도 수사 의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인열·석남준 기자 기사 A12면

해커 “原電자료 원하는 나라 많아” 수억달러 요구

‘反원전 가면’ 벗은 해커
“中東 수출 차질 빚고싶나…
산자부 장관, 생각해봐라” 협박
한수원 “이미 공개된 자료”

원전(原電) 해커가 또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연말 이른바 ‘성탄절 원전 공격’을 예고하며 순차적으로 원전 내부 자료를 공개한 이후 6번째이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활동을 중단한 지 79일 만이다. 원전 내부 도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한글 파일까지 공개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다. 지난 연말 원전 문건을 공개하며 “원전은 위험하니 가동을 중단하라”고 협박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문건 절반은 한수원 내부 자료이지만 나머지는 미래부 산하 원자력연구원 자료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날 공개한 자료는 안정성 평가 코드와 같은 이미 공개된 자료

로 공개된 화면으로만 볼 때 기밀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돈 요구하고 나선 해커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12일 오후 트위터 계정에서 ‘대한민국 한수원 경고장’이란 제목으로 25건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기로 한 중소형 원전인 스마트 원전의 증기 발생기 분석 자료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를 개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수출하는 원전의 초기 모델로 이미 학술 대회 등에서 공개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해커가 지난 연말에 내부 도면을 공개했을 때와 이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요구한 것이다. 해커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듯 “박 대통령의 원전 수출에 지장이 될까 두렵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을 거명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해커가 실제로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자신의 정체

원전반대그룹, 원자력발전소 내부 자료 유출 사건 일지

2014년 12월 9일	한수원 임직원 메일 통해 악성 코드 공격 진행
12월 15일(1차 유출)	한수원 직원 1만여명 개인 정보 파일 공개
12월 18일(2차 유출)	고리 1·2호기 배관 계측 도면 등 내부 자료 6건 공개
12월 19일(3차 유출)	원자로 냉각 시스템 도면과 사내 프로그램 캡처 이미지 파일 등 내부 자료 공개
12월 21일(4차 유출)	고리 1·2호기 운전용 도면, 원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 4건 공개
12월 23일(5차 유출)	고리 1·2호기, 월성 3·4호기 내부 도면 등 19건 공개
12월 24일	정부합동수사단, ‘원전반대그룹’이 올린 글의 인터넷 주소 대부분이 중국 선양(瀋陽)인 것으로 확인. 중국 당국에 사법 공조 요청
2015년 3월 12일(6차 유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통화 내용, 원전 관련 도면 등 12건 공개

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돈을 요구한 만큼 장기간에 걸쳐 협박과 요구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커는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듯 박 대통령의 통화 내용 파일을 해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작년 설날 유엔사무총장과 통화도 잘 하셨네요? 좋은 자료도 많던데 공개되면 어떨는지…”라고 밝혔다. 공개된 통화 내용은 지난해 1월 1일에 있었던 박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의 통화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반 총장과의 통화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실과 일부 내용이 공개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5차례에 걸쳐 한수원 내부 자료 85건 공개…북한 소행?

해커가 협박 글을 올리자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즉각적으로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북한 소행으로 보는 이유는 우선 협박 글에 북한식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통채로’와 ‘통화 요록’이란 표현이다. ‘통채’는 ‘통

째’의 북한식 표현이며, ‘요록’이라는 표현도 ‘사상범취급 요록’ 등 북한에서 주로 쓰는 단어다. 해커는 지난 연말에도 트위터에서 ‘아닌 보살’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한다) 등의 북한식 표현을 썼다. 지난 연말 해킹 이후 정부의 IP(인터넷 주소) 추적에서 중국 선양(瀋陽)의 IP가 대량 발견된 점도 북한 소행임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중국 주요 도시에 해킹부대를 상주시키며 한국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원전 도면과 내부 프로그램 사진 등 85건의 자료를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대 서균렬 교수는 “최근 월성1호기의 가동 연장이 결정됐고 고리 1호기의 2차 가동 연장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등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열·김승범 기자

한수원 해커, 대통령·반기문 통화내용 공개

**돈 달라며 원전자료 또 유출
임종인 안보특보 “북한 소행”**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을 공격했던 해커가 활동을 재개했다. ‘하와이에 서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 핵’이라고 밝힌 해커는 12일 돈을 요구하며 트위터를 통해 고리 1호기 계통 도면과 스마트원전 증기발생기 분석자료 캡처 사진 등 10여 개의 파일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1월 1일 주고받았다는 신년인사 통화 내용도 포함됐다.

해커는 “(한수원과 검찰이) 바이러스 7000여 개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축하 드려요. 나머지 9000여 개의 바이러스들이 무슨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까요”라며 재차 공격을 암시했다. 이 해커는 지난해 다섯 차례 원전 자료를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한수원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었다.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소행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 관계기사 10면

“스마트원전 파일은 구버전” ... 작년 해커와 동일범인지 추적

한수원 “업무 참고용 정도의 자료”
박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 대화록
덕담 수준이지만 실제 유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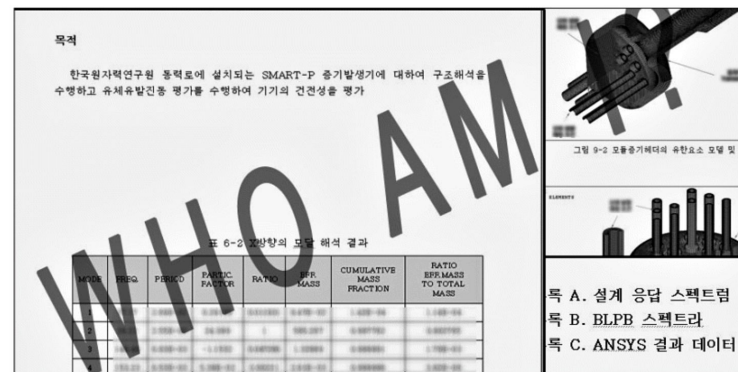
협박의 수위는 높였으나 공개된 자료는 부실했다.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와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원전 관련 자료를 공개한 자칭 ‘원전반대그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성사시킨 스마트원전 수출까지 언급하며 돈을 요구했다. 북유럽·동남아·남아메리카의 나라들이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까지 남겼다.

이번에 해커가 공개한 파일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기로 한 스마트원전의 증기발생기 분석자료 일부를 캡처한 사진이 포함돼 있다. 스마트원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100MW급 중소

형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자료다. 연구원 관계자는 “파일에 언급돼 있는 ‘스마트-P’는 2002~2006년 개발한 구버전으로 관련 내용은 각종 논문이나 학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라고 말했다.

한수원 역시 이날 공개된 자료들도 이전처럼 일반적인 기술 문서라는 입장이다. 고리 1호기 계통 도면, 냉각재 누설 검지 레이저 센서와 같은 컴퓨터 화면 캡처 파일, 냉각재 유량 분석 그래프 등이 공개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일부 도면은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책상에 출력해 붙여놓을 정도”라며 위험성을 일축했다.

함께 첨부된 ‘박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통화’ 속기록에도 특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지난해 1월 1일 오후 9시4분부터 13분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신년 인사 내용이다. ‘사무총장’으로 적시된 인물이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둘



12일 스스로 ‘원전반대그룹 회장’이라 칭한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스마트원전 관련 문서(왼쪽)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에 보낸 경고장.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주변국들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사무총장께서 계속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주고받는 식이다.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짜깁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은 “트위터에 공개된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은 “해커가 그동안 유출 강도를 높여왔는데 오늘 공개한 자료들은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며 “북한이 국면 전환용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수사단도 이 가능성을 배

대한민국 한수원 경고장

한수원과 합수단 분들 오래만이네요.
바이러스 7천 여개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축하 드려요.
나머지 9천 여개는?
9천 여개의 바이러스들이 무슨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이러스들이 원전에서 ... 연락이 왔네요.
빨리 바이러스 찾아서 축하를 한번 더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를 무난히 넘긴것은 국민들의 안전이 소중해서 인데요...
우리가 너무 조용히 있었나 보네요.
이번에는 한수원 입장도 생각해서 ... 자료를 선물로 드릴게요.

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원전반대그룹을 모방한 글인지, 지난해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한 동일범인지 여부를 FBI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통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의 진위도 확인이 어렵다.

세종=박유미 기자, 김백기 기자
yumip@joongang.co.kr

아이핀 해킹 '세탁 IP' 추적해 보니 중국 경유

경찰, VPN서버관리 업체 압수수색
수사 혼선 목적 고의 경유 가능성도

공공아이핀(I-PIN) 시스템을 공격해 75만건에 달하는 아이핀을 부정 발급받은 해커가 중국을 통해 아이핀 발급 사이트에 접속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로 추정하고 있지만, 추적에 혼선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중국을 경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은 최근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인터넷가상사설망(VPN) 서버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서버에서 가져온 내용과 가입정보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해커가 이 업체로부터 할당 받은 VPN 인터넷주소(IP) 10개 가량을 이용해 아이핀 발급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VPN을 거칠 경우 IP추적을 하더라도 글을 쓴 위치가 어딘지 바로 확인되지 않아 일종의 '세탁 IP'로 많이 사용된다. 또 VPN 서비스에 가입할 때 명의를 도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추적이 쉽지 않다.

경찰은 특히 해당 업체 VPN을 사용한 IP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커가 중국 지린(吉林)성 지역에서 접속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도 이번 해킹에 중국어 버전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린성과 함께 라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성은 중국 해커들의 주 활동 무대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도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커가 일부러 중국 지역 IP를 경유지로 사용했을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커가 주민번호가 유출된 이모씨 등 3명의 공인인증서 정보도 도용한 단서를 잡고, 금

용결제원을 상대로 인증서 발급 과정 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 발급된 사실을 파악했다. 범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아 발급절차를 진행한 후 76만4,42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75만개를 발급받아 25만여회에 걸쳐 게임사이트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의 가입정보를 변경하는 등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애플에 무슨일이

앱스토어 12시간 불통...40개국 동시다발 발생

애플 앱스토어 밤새 '먹통'

“내부 DNS 오류 탓” 아이튠즈도 접속 장애

애플 앱스토어와 아이튠즈 등 주요 서비스가 약 12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켜 세계 곳곳의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애플 콘텐츠 서비스는 1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시45분(태평양 표준시 기준)까지 미국 스위스 영국 등 40여개국에서 마비됐다. 이날 장애로 앱스토어를 실행하면 첫 화면에 “앱스토어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라는 안내창이 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애플은 이날 장애에 대해 사과하면서 내부 DNS(도메인네임서

버) 오류에 따른 것이며 해킹 등 외부 요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애플은 “아이튠즈와 다른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끼친 것에 사과 드린다”며 “장애는 내부 DNS 서버 오류에 따른 것으로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인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등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 비해 애플의 서비스 장애는 흔치 않은 일로 장시간 복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애플 서비스 장애의 경우 6시간 만에 복구가 이뤄졌다. 애플은 온라인 스토어가 다운되면 시간당 200만달러의 손해를 보는 꼴이 돼, 이번 사고에 따른 손해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병준기자 ddak@hankyung.com

애플 “내부 DNS 오류” 손해 수백억원 달할 듯

애플의 모바일 콘텐츠 마켓인 앱스토어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12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또 아이튠즈와 아이박스, 맥 앱스토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애플 온라인 서비스 역시 장시간 오류가 나 손해만 수백 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11일(현지시간) 회사 고객 지원 사이트를 통해 애플의 아이튠즈와 앱스토어, 아이박스, 맥앱스토어 같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5시께부터 중단됐고, 이후 11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4시45분쯤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로 전 세계 40여개 나라의 애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동안 앱스토어 사용을 시도하면 “앱스토어가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안내 창이 떴으며,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는 애플 온라인 서비스 장애에 관한 사용자들의 불평이 계속 올라왔다.

국내에서도 국내 시간 11일 밤과

12일 새벽 사이 앱스토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

이밖에 애플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메일과 아이클라우드 계정 로그인 등도 비슷한 시간 대에 4시간 가량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가 계속되자 애플은 서둘러 사과를 하고 장애 원인을 밝혔다. 애플은 현지 방송사를 통해 “이번 장애는 내부 DNS(도메인 네임 서버)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 서비스가 한꺼번에 장애를 겪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애가) 해킹 공격 등 외부 요인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장애로 애플은 수백 억 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은 온라인 스토어가 다운되면 시간당 200만 달러(약 22억원)의 손해를 보는데, 계산해보면 270억원 손해가 발생한 셈이기 때문이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튠즈 스토어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은 매출의 6%를 차지하며, 최근 발표된 지난 분기 매출은 48억 달러(약 5조원)였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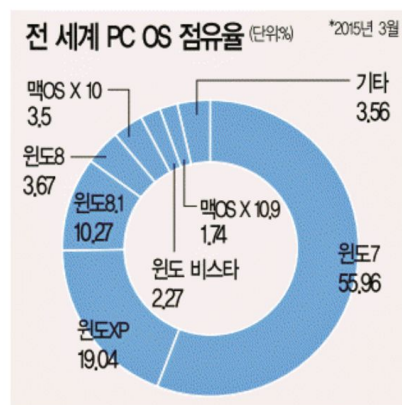
MS 윈도우XP 지원 중단 1년째... 여전히 PC OS 점유율 2위

“보안 위험 감수하고 그대로 사용”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XP가 지원 중단된지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점유율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보안 부문에 대한 지원이 종료됐지만, 일부 기업과 개인들은 윈도우XP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시장조사업체 넷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윈도우XP는 전세계적으로 19.04% 점유율을 기록해 55.96%인 윈도우7에 이어 PC OS 부문에서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윈도우 8.1(10.27%)과 윈도우8(3.67%)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다.

MS는 지난해 4월 8일을 기점으로 윈도우XP 지원을 종료했으나, 일부 사용자는 보안 위험을 감수하고 여전히 윈도우XP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지적됐던 금융과 대기업 등의 지난해 대부분 윈도우 상위 버전으로 교체를 했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비용과 시스템 호환 등을



(자료:넷애플리케이션)

이유로 교체를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윈도우XP 사용 비중은 지난해 4월 기준 13%, 현재는 5% 전후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MS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의 윈도우XP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주요 국가의 윈도우XP 점유율은 한자릿 수”라며 “지난해부터

국내 중소기업 사용자들을 위한 윈도우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PC환경의 변화가 윈도우P 전환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PC의 중심이 OS에서 웹브라우저로 이동하고, 웹서비스로 SW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면서 일반 사용자들은 교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윈도우XP는 취약점을 노린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 버전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취약점 문제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위 버전으로 전환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금융서비스를 하지 않고 웹서핑만 한다고 해도 이메일 계정과 암호는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국민일보

2015년 03월 13일 금요일
025면 사람들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방통위 표창



박준희(사진) (주)아이넷방송 회장이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국 케이블TV 20년 기념식 및 케이블TV 20년 행복 나눔 방송 축제'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한국가요전문채널인 (주)아이넷방송은 창조적인 콘텐츠 기획과 고품질의 HD 자체 제작 중계차 도입 등을 통해 시청자 중심의 경영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서울경제

2015년 03월 13일 금요일 A01면 종합



알립니다

서울경제 'FIT 포럼' 엽니다

16일 첫 개최...오후 2시 국회 서울경제신문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한 '서울경제 FIT(Future, Insight & Trend) 포럼'을 신설합니다. 미래·통찰·흐름이라는 세 화두를 놓고 FIT 포럼은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등장 등 환경 급변으로 미래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성장 탈피를 위해 전통산업에 ICT 융복합화의 속도를 높이고 사물인터넷(IoT)·3D프린팅·빅데이터·웨어러블기기·핀테크·무인자동차·헬스케어·인공지능·로봇·의료·우주산업·미래농업 등 신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제1회 FIT 포럼은 'ICT 융합과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규제환경'을 주제로 대한민국 ICT 기술 강국, ICT 서비스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질문도 가능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1회 서울경제 FIT 포럼 'ICT 융합과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규제환경'	
일시	2015년 3월 16일(월) 오후 2시 ~ 4시30분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문의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 (02)724-2478
주최	서울경제신문,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후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경제

데스크라인

장 지 영

정보통신방송부장 jyajang@etnews.com



궁금하다. 왜 구글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 할까. 한국에선 5년째 적자 사업인데 말이다. 돈 안 되는 알뜰폰에 베팅하는 이유는 뭘까. 남 몰래 경천동지할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발견한 것일까.

지난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뉴스는 '배일을 벗은 갤럭시S6'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토픽은 '구글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었다.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다.

구글은 이미 휴대폰 제조사 모토로라를 인수했다. 마지막 미지의 땅인 네트워크(알뜰폰) 시장까지 밟으면 그야말로 '구글왕국'을

서였다. 자체 콘텐츠를 보유하면서 콘텐츠 사업자와 판권료 협상에서 유리해졌다. 불안한 콘텐츠 외부 의존 매커니즘에서도 벗어났다. 그 결과, 이제 말 안 듣는 스튜디오에 계약하지 않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을 수 있게 됐다.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 질서가 붕괴됐다.

구글 알뜰폰 진출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구글이 보유한 유튜브, 검색 등의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것이다. 유튜브 동영상 소비가 늘어나려면 통신료가 내려가야 한다. 유튜브, 검색 이용자가 늘어나면 구글은 광고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결국 구글 전략은 뻔하다. 알뜰폰 사업으

구글의 배신

완성한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로 이어진 정보통신 생태계를 모두 섭렵한 유일무이한 기업이 된다. 구글이 노리는 것이 이런 명예로운 타이틀일까.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등과 협업을 지향했다. 그것이 훨씬 실리적이었기 때문이다. 괜히 통신사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표변했다.

구글 변심에 문득 떠오른 기업이 있다. 바로 동영상 스트리밍(VoD)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도 일종의 배신을 했다. 지난 2013년 자체 제작한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전격 발표했다. 콘텐츠 유통만 하던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도 직접 뛰어 들자 콘텐츠 제작사들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넷플릭스는 이후 아예 대형 스튜디오까지 갖고 히트작을 쏟아냈다.

넷플릭스가 직접 콘텐츠 제작에 나선 이유는 분명했다. 플랫폼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로 통신료 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것이다. 알뜰폰 자체로 돈을 벌기보다는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공짜로 뿌린 것과 똑같은 원리다.

구글발 통신 시장 균열은 예상외로 빠를 수 있다. 구글 알뜰폰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알뜰폰 업체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구글 위력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알뜰폰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알뜰폰으로 대거 몰릴 것이다. 통신사들이 이를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통신사의 생사는 '도망가는 속도'에 달렸다. 꼬리 물기 게임과 비슷하다. 구글이 시장을 잠식해오는 속도보다 통신사의 신시장 개척 속도가 빨라야 살아남는 게임이다. 이번 MWC에서 선보인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새 비즈니스에 '제트 엔진'을 달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우물쭈물하면 바로 아웃이다. 몰락한 노키아 그림자가 통신업계에도 깊게 드리우고 있다.

■ 기 고

‘구름 걷힌’ 클라우드法, 이제 비즈니스다



윤희용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보안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정립이나 법 집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 등이 남아 있지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 투자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 많은 긍정적 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고용 증대,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신규 융합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한국 시장은 ‘뜨거운 감자’다. 해외 시장은 어떨까. 최근 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BM 행사에 다녀왔다.

인상적인 점은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온 2만여 명의 경영진이 클라우드

에 대해 꽤 높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클라우드를 단순 정보기술(IT)로 보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의 수준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거나 또는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들도 산업 특성과 상관없이 다양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본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는 1만여 명의 뷰티컨설턴트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구매 정보, 재고 현황 등을 제공한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미국 텍사스대 MD앤더슨암센터는 암 진단과 치료에 IBM 슈퍼컴퓨팅 왓슨을 도입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환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적시에 가장 적절한 치료책을 찾아 헬스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 60만건 이상의 논문과 임상 결과를 분석해내 3초도 채 안돼 적합한 수술법을 환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클라우드다.

클라우드는 더 이상 IT가 아니며,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은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첫째, 기존 기업들이 갖고 있는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잘 연계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연결이 됐다면 데이터 간 이동성도 고려돼야 한다. 기업의 클라우드 채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가 혼재된 상태가 된다.

이때 기업은 각각의 업무, 각각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담고 있는 데이터를 기업 전체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 통합 관리와 효율적 IT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향후 IT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IBM은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안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서 보안은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표준기술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개방형 표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인증, 기업 데이터 유출 방지 등 보안성 강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기술부터 데이터 분석, 보안까지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클라우드 도입은 새로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클라우드는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혁신 수단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세이도와 MD앤더슨암센터 병원을 비롯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을 비즈니스에 접목해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클라우드의 비즈니스적 가치는 충분히 검증됐다 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도입하고 성과를 낼 것인지를 준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경험을 갖춘 기업들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협력을 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번 클라우드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 민간, 학계가 지혜를 모아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이 법안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단통법이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실패작이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유통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잘못된 정책이 되어 버렸다. 본래의 취지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막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불공평하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단통법 제정의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책정된 보조금 상한액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소비자들이 지원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던 단통법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만들어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 준 셈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인 휴대전화 판매점들도 단통법 이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충분한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

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전국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3만개 이상이었고 관련 종사자도 30만명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붕괴와 실업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누구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그런 불공평함이 사라지는 대신에, 국민 모두 비싸게 사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왜 이 법이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 단통법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판매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보다 비싸게 구입했던 소비자를 판매원들이 바보 고객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고 국회의원들은 분개했다. 이 같은 ‘저관여 소비자’를 입법활동을 통해 보호하겠다고 나선 결과, 더 저렴하고 좋은 조건의 제품을 고르려고 발품을 팔던 ‘고관여 소비자’까지 모두, 바보 고객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재래시장 가격과 백화점 가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래시장에서도 백화점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정부가 말하는 효과는 일부 구형 단말기에만 집중됐을 뿐, 소비자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내수 경제살리기’에도 걸림돌만 되고 있다. 또한 지

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보완책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긴 마찬가지다.

시장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인데, 단순히 법으로 그때그때 따라가면서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다. 또한, 신기술 휴대폰을 개발하였을 때, 소비자의 반응을 실험할 시장을 잃어버린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테스트베드로서 가치가 높았던 이유는 IT 시장 환경 조성으로 ‘얼리어답터 소비자’의 역할이 컸었고, 이와 같은 분위기 조성에 판매 지원금 효과가 한몫을 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출시 15개월 이전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보조금 상한액 규제를 하기 때문에,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 폰은 더 이상 ‘얼리어답터 소비자’의 손쉬운 상대가 아니다. 결국 신기술제품의 개발 주기가 느려지고 수출의 기술경쟁력도 약화될 우려마저 있다.

또한, 단말기 제조회사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보조금을 예상하여 일반폰과 고가폰의 국내 공급가를 일부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게 책정해 운영하여왔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거품 공급가는 눈감아주고 지원금만 축소했기에 단말기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와 같은 대기업은 팽파르를 울리고 판매 자영업자와 소비자는 독배를 마시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합리한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대대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 한다.

인사

▲외교부▷북미국 심의관 조구래▷장관정책보좌관 이상화
▲문화체육관광부▷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김정배▷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윤남순▷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특구기획담당관 정영석▷국립중앙극장 근무(과장직위) 강재수
▲보건복지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과장 김인기▷국립제주검역소장 홍성진▷

국립목포검역소장 류강희▷국립포항검역소장 김맹섭
▲한국은행▷통화정책국장 허진호▷금융시장국장 신호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부원장 신중호▷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이영주▷자원전략연구실장 김유정
▲경희대▷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임영진

부음

▲김성락 前 상공부 구미공단관리소장 별세, 정순자 남편상, 김수원 사업·김광언 사업·김동원 원자력문화재단 연구위원·김정원 삼성물산 상무 부친상=12일15시42분 서울삼성병원, 발인 14일9시, (02)3410-3153
▲김영배 별세, 박재분 남편상, 김형진 경향신문사 총무팀 차장·김호선 아가방 근무·김호숙 해피랜드 근무·김호경 부친상, 서용상 삼성에스원 차장·김상일 사업 장인상, 양한영 시부상=12일11시36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5시30분, (02)2227-7587
▲송성현 별세, 송호균 한겨레 사회부 기자·송호림 NH투자증권 근무·송지은 청조사 대표 부친상, 홍덕만 서울대 의대 교수·이태선 대한항공 근무 시부상=12일9시30분 서울대병원, 발인 14일6시, (02)2072-2022
▲윤수영 별세, 윤찬태 한국무역보험공사 아시아보상팀장 부친상=12일14시30분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14일9시40분, (053)958-9000
▲이계연 별세, 김임주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소장 모친상, 이형조 울산시 문화예술과장 장모상=11일20시30분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13일6시30분, (055)750-8654
▲이종택 별세, 이권우 前 국회 관리관·이치우 진주외고 교사·이석우 前 상원고 교사·이창우 사업 부친상, 홍석 前 경남대 교수 장인상, 정정옥 前 매천고 교사 시부상

=12일18시 경북대병원, 발인 14일6시30분, (053)200-6149
▲이태순 별세, 오세만 서원기업 대표·오창준 지원메디칼 이사·오만순 한국은행 근무 모친상, 김기섭 前 삼성화재 부장·정현문 사업 장모상, 오민석 SK케미칼 근무 조모상=12일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8시, (02)3010-2231
▲최달식 별세, 최영석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 보좌관 부친상=12일8시 구미아성병원, 발인 14일9시30분, (054)443-5873
▲최선례 별세, 양병선 모두투어네트워크 부사장 모친상=12일4시 한양대병원, 발인 14일8시, (02)2290-9452
▲최영수 별세, 김경인 前 인하대 교수 부인상, 김효원·김남윤 모친상, 박승규 LG전자 책임연구원 장모상=12일14시59분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4일5시30분, (02)3779-2182
▲하영태 前 현대엔지니어링 부장 별세, 김은미 남편상, 하홍일 아이오엔터테인먼트 근무 부친상, 이다정 분당시보건소 간호사 시부상=12일17시44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9시30분, (02)3010-2233
▲황정호 별세, 황영길 현대자동차 성북삼선교점 대표·황영선 사업·황영만 사업 부친상=12일6시40분 고대안암병원, 발인 14일7시, (02)923-4442